

# 보도자료

2025. 6. 23.



문의

## 양형위원회

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
(☎ 02-3480-1924)

### 제10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·수정 대상범죄 등 선정

- 양형위원회(위원장 이동원)는 2025. 6. 23. 제139차 전체회의를 열어, 제10기 양형위원회 2년의 임기 동안 수행할 과업을 의결하였음
  - ① 설정 대상 범죄: 자금세탁범죄, 응급의료·구조·구급범죄,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(벌금형 포함)
  - ② 수정 대상 범죄: 증권·금융범죄, 사행성·게임물범죄, 대부업법·채권추심법위반범죄, 디지털 성범죄, 무고범죄
  - ③ 전체 범죄군의 양형기준 중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
-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, 범죄의 발생 빈도,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의 필요성(법령의 개정 여부, 양형실무상 요청),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·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함
- 양형위원회 임기를 상반기(2025. 4. 27.~2026. 4. 26.)와 하반기(2026. 4. 27.~2027. 4. 26.)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, 시행할 예정임
  - 상반기: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, 증권·금융범죄, 사행성·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,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
  - 하반기: 응급의료·구조·구급범죄,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, 대부업법·채권추심법위반범죄, 디지털 성범죄, 무고범죄 양형기준 수정

## 1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선정

### ■ 설정 대상 범죄 선정 기준

-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, 범죄의 발생 빈도,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(양형이 특히 어려운 유형의 범죄 또는 실무에서 양형기준 설정의 요청이 있는 범죄) 등을 **종합적으로 고려함**

### ■ 선정된 설정 대상 범죄

#### ○ 자금세탁범죄(징역형)

- **해당범죄**: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, 외국환거래법 위반,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재산국외도피),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반 범죄
- 자금세탁은 사회적으로 엄벌 필요성이 높은 보이스피싱, 뇌물,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자산으로 전환 또는 가장하는 것으로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수단에 해당하여 실효적인 처벌이 요구됨
- 관계 기관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요청을 한 바 있고,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(‘웰컴투비디오’) 운영자 등과 관련하여 **국민적 관심**이 집중되기도 함
-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고, 선고사건 수도 다수여서(2020년~2024년까지 징역형 1,119건 선고)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큼

#### ○ 응급의료·구조·구급범죄(징역형)

- **해당범죄**: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, 소방기본법 위반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
-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보호**하고, 소방대원, 구급대원의 구조·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**엄정히 대처**하기 위해 양형기준의 설정이 필요함
- 최근 해당범죄들에 대하여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상 감경규

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신설되고,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·치사 등을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였음

- 그럼에도 발생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고, 사회적 관심도 높으며, 처벌 강화에 대한 요청도 상당함

## ○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(징역형 및 벌금형)

☞ 기존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신설하여 수정하는 방식

- 해당범죄: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(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), 같은조 제2항 제2호 위반(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방해행위)
- 발생 빈도가 높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큰 범죄임
-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(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)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23. 1. 3. 처벌규정이 개정됨
-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2024. 12. 3. 신설되어 2025. 6. 4. 시행될 예정임(사례군 축적을 위해 하반기에 양형기준 신설 예정)

## ②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 선정

### ■ 수정 대상 범죄 선정 기준

- 양형기준 수정은 통상 권고 형량범위 상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거나, 양형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☞ 법령이 개정 되거나 국민적 요청 및 실무 요청이 큰 범죄를 우선 수정 대상으로 선정함

### ■ 선정된 수정 대상 범죄

#### ○ 증권·금융범죄

- 증권·금융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,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그 권고 형량범위 등이 수정된 바 없음 ⇨ 그 후의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
- 2018. 3. 27.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(10년 이하 징역 → 1년 이상 유기징역), 2021. 1. 5.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

매도 방법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

○ 사행성·게임물범죄

- 변화한 도박범죄의 행위태양(특히 청소년에게 불법도박을 공급하는 행위),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불법 사행성 범죄의 사회적 폐해, 범행 결과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기존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
  - 법률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\*되어 이를 반영하면서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
- [\* 관광진흥법상 무허가 카지노업(5년 이하 징역 ➡ 7년 이하 징역), 경륜·경정법상 유사경륜·경정 등(3년 이하 징역 ➡ 7년 이하 징역), 한국마사회법상 유사경마(5년 이하 징역 ➡ 7년 이하 징역)]

○ 대부업법·채권추심법위반범죄

- 불법사채 및 악질적 불법추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바라는 국민적 요청이 크고, 이에 최근 대부업법 개정이 이루어져 법정형이 대폭 상향됨\*\*
  - 법정형과 행위태양이 유사한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여 채권추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- [\*\* 미등록 대부업 등(5년 이하 징역 ➡ 10년 이하 징역), 이자율 제한위반 등(3년 이하 징역 ➡ 5년 이하 징역) 등]

○ 디지털 성범죄

-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(이른바 딥페이크 범죄)의 심각성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,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의 요청이 있는 범죄임
  - 법률개정으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\*\*\*되었고,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,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의 처벌규정이 신설\*\*\*\*되었으므로, 기존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, 신설된 처벌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
- [\*\*\*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, 반포 등(5년 이하 징역 ➡ 7년 이하 징역),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(7년 이하 징역 ➡ 3년 이상 유기징역) 등]

[\*\*\*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처벌규정이 2021. 3. 23. 신설된 후(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) 2025. 4. 22. 개정.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 처벌규정이 2024. 10. 16. 신설(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)]

#### ○ 무고범죄

-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는 2009년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설정, 시행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됨
- 고소·고발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고범죄 엄벌을 통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상당하고, 무고한 범죄의 경중, 즉 행위불법의 차이가 양형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⇒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등 기존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

### ③ 전체 범죄군에 걸친 양형기준 수정 관련 업무

#### ▣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

-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수정·설정할 때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[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'(공탁 포함)' 문구 삭제 및 정의규정 정비]하여 왔으나, 전체 범죄군에 걸쳐 체계적·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
- ☞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'(공탁 포함)'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
- 나아가 범죄피해자구조금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험금,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그에 관한 구상 의무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,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함

### ④ 제10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·수정 업무 추진 방식 및 시기

#### ▣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 의결, 시행

- 양형위원회 활동을 규모 있게 세우고, 수립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의 임기를 상반기(2025. 4. 27.~2026. 4. 26.)와 하반기(2026. 4. 27.~2027. 4. 26.)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, 시행하기로 함

- 상반기에 국민 여론이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요구가 비교적 높은  
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, ② 증권·금융범죄, ③ 사행성·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, ④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
- 하반기에 개정법 시행에 따른 양형사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 
① 응급의료·구조·구급범죄, ②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, ③ 대부업법·채권추심법위반범죄, ④ 디지털 성범죄, ⑤ 무고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

#### ■ 10기 양형위원회 회의 등 일정

- 임기 중 양형위원 전체회의 14~15회, 전문위원 전체회의 13~14회, 공청회 2회, 심포지엄 4회 가량의 개최 등을 예정하고 있음
- 양형위원회는 각 양형기준을 설정 범위 ⇨ 유형 분류 ⇨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의 기준 ⇨ 양형인자 ⇨ 집행유예 기준 순서로 심의·의결함
-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양형기준을 의결함

#### [참고] 양형기준 설정, 수정 절차

단 계	주체	내 용
1	양형자료 조사·분석	운영지원단
		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확정기록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및 분석
		↓
2	양형기준 초안 작성	전문위원
		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
		↓
3	양형기준안 의결	위원회
		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 마련
		↓
4	공청회 및 의견조치	위원회
		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와

			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치 절차 진행
↓			
5	양형기준안 수정 및 양형기준 확정	위원회	공청회와 의견조치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하여 양형기준 확정
↓			
6	양형기준 공개	위원회	최종 의결된 양형기준은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

## ⑤ 다음 회의 및 심포지엄 안내

### ■ 제14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

- 일시: 2025. 8. 11. (월) 오후
- 장소: 대법원 내 회의실
- 안건: 증권·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 심의,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

### ■ 양형연구회 제14차 심포지엄 『심신미약과 양형』

- 일시: 2025. 6. 30. (월) 14:00~18:00
- 장소: 대법원 1층 대강당